

와타나베 히로시 지음/박홍규·김선희 옮김,
『일본 정치사상사-17~19세기』,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5.

유불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일찍이 한 노(老)석학은 한국정치사상에 대한 필생의 작업을 집대성하며 이와 같이 물은 바 있다. 한 문명의, 어느 한 나라의 사상을 조망해보려 한다면, 대체 거기에는 무엇을 포함시키고 또 어찌 엮어내야 좋을까. 이렇게 통사(通史)를 기술한다는 것은 특정한 주제나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가 아니라, 그 정치공동체, 그 겨레 나름의 문제의식을 충실히 짚어내고, 거기에서 피고 진 갖가지 숙려(熟慮)를 오롯이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극히 까다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이때 대상으로 삼는 것이 다름 아닌 정치사상임에랴.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치’ 사상은 “정치적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고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해당 사회를 실제로 변화시켜 왔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정영훈 외, 2006). 덕분에 정치사상에 대한 고찰은, 그에 대한 통사적 고찰은 말 그대로 그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요하게 된다.

어려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때로는 그 영향이 너무나 지대했던지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나아가 새 시대마저 열어젖힌 듯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정치사상은 당세를 초월한 듯 보일 지경이다. 하지만 그 “생산과 유통과정” 쪽에 유의해 본다면, 그렇게 가장 혁명적이었던 사상에서조차 역시 당대적 환경의 제약을 피할 수는 없었다(신복룡, 2011). 바꿔 말하자면 결국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의 사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상의 본질과 내용은 그 사상가가 놓여 있는 환경과 여건, 곧 시대적 제약”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만

큼 정치사상에 대한 고찰에서는 그것이 미친 사회적 영향 문제 이상으로, 거꾸로 그 사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당대의 환경요인 및 그와의 관계에서 갖는 의의에 대한 또 하나의 포괄적인 이해가 필수적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2010년 출간된 이래, 영어판을 비롯해 이제 한국어판으로 번역, 간행되기에 이른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와타나베 히로시(渡辺浩)의 『일본 정치사상사』는 “일반 독자를 위한 간략한 통사”로서 저술되었음에도, 이 이종의 과제를 균형 있게 충족시켜낸 보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혹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소설’처럼 쉬이 읽힐 정도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더더욱 특기할 만하다.

I.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세상 모든 이’를 위해 통사를 쓴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독자들조차 “일본 정치사상사”라는 저 제목 덕분에 도리어 압박감부터 받을지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자연스레 저자의 스승으로서 우리나라에도 익히 잘 알려진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저 『일본정치사상사 연구』를 연상시킬 터이기 때문이다. 사실, 해당 저작은 한국어판 해제에 실려 있는 어느 석학의 발언대로 결코 쉬운 책이 아니다. “복잡한 분석을 꼼꼼하게 더듬어갈 정도의 인내심”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전에 우선 도쿠가와(徳川) 시대의 유학이나 고쿠가쿠(国学) 등에 대한 사료들을 읽어낼 수 있는 언어적 소양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루야마의 저작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전문 연구서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와타나베의 본 저작은 학문적인 치밀함에서야 마찬가지로 충실하지만, 훨씬 더 열린 독자층을 상정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특이하고, 일견 기묘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상이 출현한 환경·상황을 잘 이해하면 누구라도 (찬동하진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본문 p. 6) 그리고 이런 그의 믿음은 비단 일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문자 그

대로 온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 “저는 이 책을 일본어로 썼지만, 일본인을 위해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일본인으로서 쓰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세상 모든 이’를 향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지극히 보편적인 관점에서 서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저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일본이라는, 흥미롭지만 그의 표현처럼 기묘하기 짝이 없는 낯선 대상으로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서 와타나베는, 우리에게 이미 아주 효과적인 ‘타임머신’이 주어져 있음을 상기시킨다. ‘문자’가 바로 그것이다. 사상가의 사변적인 저작에서 정부의 공문서, 세상에 대한 잡다한 소문을 담은 가십거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종횡무진으로 방대한 사료들을 구사해 가며 문명개화 즈음까지의 400여 년에 걸친 일본 역사 속으로 독자들을 밀어 넣는다. 그리고 생생하게 펼쳐지는 저 눈앞의 세계 속에서, 그런 세상에서는 대체 무엇이 ‘정치’적인 문젯거리로서 고민되고 또 논해졌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

덕분에 일본열도라는 비교적 고립된 특수한 조건상, 그 정치사상적 궤적이 마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기묘한 동물”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특함이 어디서 기인되었고 또 어떤 나름의 발전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초장기 군사정권”으로서의 독특했던 저 ‘도쿠가와 시대’가 그 와중에 어떻게 맥없이 붕괴되고, 또 이미 당대에 “역사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급진적인 혁명”이라 일컬어질 만큼 엄청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전면적인 변화, 즉 메이지유신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명징하게 보여준다.

II. ‘사상성립의 사회적인 장(場)’¹을 통한 접근

이와 관련해서, 와타나베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서 특히 여덟 사상가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지적인 영향력’이 그것으로,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¹ 渡辺浩, 『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98), p. 75.

와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및 나카에 초민(中江兆民)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꼽은바, 이 범주에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속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살아생전에는 학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지언정, 당대의 맥락 속에서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사상을 전개한 경우로서 안도 쇼에키(安藤昌益)와 가이호 세이료(海保青陵)를 들고 있다.

이들에게는 각기 한 장씩, 총 여덟 개의 장이 할애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 이는 전체 스물두 장 중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장들에서는 무엇이 다뤄지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 온 최강의 체계적인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도쿠가와 시대의 정치사상사에서 그 전개상 ‘기축’에 해당하던 유학에 관한 논의가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그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틀은 무엇인가(제1장 중화의 정치사상: 유학)? 그런 사상은 특히 도쿠가와 체제에서 어떤 함의를 갖게 되었는가(제5장 매력적인 위험 사상: 유학의 섭취와 압력)? 그런 와중에서, 당시 일본에서 유학에 관심을 가졌던 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저 ‘거대하고 근엄한 사상’, 즉 주자학은 어떤 것이었는가(제6장 이웃 나라의 정통 사상: 주자학의 체계)?

또 하나의 축에는, 200년 이상 세습된, 하지만 실전 경험은 전무했던 군사조직이 균립하던 도쿠가와 시대에는 그 정치 및 사회적 양상이 어찌 전개되었는지의 분석이 놓여 있다(제3장 어위광의 구조: 도쿠가와와 정치체제, 제4장 가적국가와 입신출세). 그에 대해 통치를 받는 이들은 어찌 여겼으며, 또 이 같은 정치권력에 어찌 반응했을까(제12장 어백성과 강소)?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세계를 어찌 인식했으며, 그런 인식의 틀 속에서 서양이라는 존재, 그리고 저들에 대한 개국에 대해 어떻게 여겼을까(제15장 일본이란 무엇인가: 구조와 변화, 제17장 서양이란 무엇인가, 제18장 사상 문제로서의 개국)? 또한 개화에 대해서는(제19장 와해와 일신, 제20장 문명개화)? 이렇게 와타나베는 자신이 타임 슬립 시킨 독자들에게, 우선 그들 앞에 펼쳐진 저 도쿠가와 시대라는 세상이 대체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실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소위 우뚝한 봉우리 격 사상가들이 그저 줄줄이 나열되거나, 혹은 특정한 이론적인 틀부터 선언된 여느 학술서, 여느 통사류 저작들과는 매우 다른 이 책만의 특색이라 하겠다. 왜 굳이 이런 설명 방식을 택한 것일까? 그가 보기에는

비록 ‘우리의’ 저명한 사상가들을 다룰지언정, 저들의 학설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서는 ‘오늘날 우리’ 독자 대다수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저들의 사상은 이제 작금의 정치적인 맥락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도리어 유럽의 정치사상가들 쪽이 더 친숙하지 않은가? 따라서 일본정치사상사의 함의와 즐거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과거 문헌들의 사회적, 정치적, 지적 배경부터 설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하여 저들 위대한 이론가들의 복잡다단한 사상을 이런 배경에 맞춰 위치시킬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함의가, 그들의 숨겨진 지혜가 우리 앞에 적확하게 드러나리라는 것이다.

III. 어느 지나치게 성공적이었던 체제의 자기귀결?

이렇게 가능한 한 철저하리만치 내재적으로 접근하는 덕분에, 자연스레 그 시대 그들 나름의 정치적 고민거리가 절로 떠오른다. 무엇이었을까? 흥미롭게도 그것은 무가정권의 소위 무위(武威)에 의한 다스림이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특히 한국의 독자들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와타나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강자의 지배가 당연하게 여겨졌다면 단지 강자로서 지배하면 된다. 계속해서 승자라고 여겨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다. 당시 사람들은 후세의 일부 역사가들처럼 통치의 정통성 원리가 무엇인지 탐색하지도 않았다.” (본문, p. 65) 말 그대로 “압도적인 폭력에 대한 두려움의 환기가 복종을 보증”하던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다.

한번 이 같은 체제가 성립되자, 또한 그런 조건상 당연히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일련의 문제들이 차례로 등장하게 되었다. 오랜 내전을 종식시킨 최후의 승자로서 도쿠가와 정권의 위광은 빛나고 또 빛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무위로써 약자의 복종이 완벽하게 조달되어, 심지어는 도리어 진정한 강자임을 증명할 기회마저 사라져 버린 세상. 그렇다면 이런 태평세의 어정밀(御靜謐, 잘 다스려져 평온함)과는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존재로서, 무사란 대체 어떤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일까. 그리하여 결국 다음 전쟁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200년의 세월을 흘러보낸 끝에, “억울하도다! 방구석에서 쓰러져 죽다니. 너무 훌륭한 시대에 태어났기에!”라 부르짖을밖에 달리 도리가 없던 이들의 ‘만성적인 정체성 위기’는 어찌 해소하면 좋단 말인가? 이런 ‘체제적 딜레마’를 두고 보신과 ‘충의의 마조히즘적 광태’가, 타락한 모습에서부터 무사다운 체 꾸미기에 이르기까지 상상 가능한 온갖 백태와 갖가지 모색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유학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를 풀어보려는 시도 또한 대두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사들의 몰락은 뒤집히는 일 없이 깊어만 갔다. 심지어 결혼시장에서도, 요시와라(에도의 대표적인 유곽)에서조차 기피될 만큼 그들은 사회적 위신을 잃어버렸다(본문, p. 339). 와타나베는 메이지유신에 대해서도, 이들 무사들의 입장에 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간 흔히 일컬어지던 대로 지사나 의사(義士) 같은, 요컨대 추상적인 대의를 위해 직분도 목숨도 내던진 헌신적인 자원봉사자가 하필 이즈음 대거 출현했다고 보는 것은, 혹은 조숙한 내셔널리즘이 웬지 역사상 딱 이때 발현된 양 설명하는 것은 역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혁명의 주체가 되었던 하급 무사들은 그간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체제적인 딜레마 속에서 위신은 땅에 떨어진 데다, 문벌제도 때문에 뭔가 운명을 바꿔본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던 그런 이들이었다. “가슴이 팍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을 그들, 즉 ‘불평사족’에게 대외적으로 긴장감이 발생하고 ‘해방(海防)’이 과제가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줄기 빛이었다. 무사로서 활약할 날이 드디어 도래하였다는 예감에, 문자 그대로 무사로서 전율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본문, p. 397)

그리하여 “어위광(御威光)으로 위압적이고 빛나던 막부를 존왕을 들어 매도하자니,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슴이 후련해졌을 것이다. 양이도 못하는 겁쟁이라고 불충한 막부 관리를 헐박하여 천벌을 내리면서 쾌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공론을 따르라고 외치며, 가신들의 문벌을 깃소리 못하게 하고, 나아가 번주(藩主)까지 조종하는 것은 속 시원한 일이었을 것이다. 지사들의 위압적인 자세와 종종 사디스트적인 폭력의 배후에는 르상티망과 ‘정의’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다”(본문, p. 398). 그리고 새로운 혁명정권은, 이에 화답하듯 ‘국시’로서의 5개조 서문 중 “모두 각기 뜻을 이루고, 인심이 지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요한다.”라고

못 박았다(본문, p. 398). 200년 이상 고뇌하고 올분에 쌓여있던 무사 자신의 ‘해방 선언’이 나온 셈이었다는 것이다.

IV. ‘사상문제로서의 개국’이라는 문제

이렇듯 와타나베는 기왕의 못 사상적 흐름이 어떻게 체제의 붕괴를 향해, 그리고 유신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도도한 흐름을 이루어 갔는지, 어디까지나 도쿠가와 일본이라는 장 내에서 설명해 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그간 흔히 외압에 의해 억지로 열어젖혀진 양 치부해 온 개국 문제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실상 일본에서도 메이지시대 이래 그렇게들 일컬어 왔지만, 과연 정말로 그랬던가? 그에 따르면, 이는 한때 양이(攘夷)를 외치며 도쿠가와 정권을 옥죄었건만, 그 후 일변해 개국을 용인한 메이지 신정부의 지도자에게도 스스로를 정당화하기에 편리했기에 그런 척했을 뿐,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음을 지적한다.

애초에 개항과 개국이라는 문제가 쿠로부네(黒船)의 도래로부터 시작되었던가? 나아가 이때 페리 제독은 ‘군사적 압력’만을 앞세웠고, 일본 측은 그 압력에만 반응했던 것일까. 하지만, 정작 페리는 쇼군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연안에 표착한 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막론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인자하게 무휼(撫恤)하고 있다. 귀국의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자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바란다.”(본문, p. 369) 요컨대, 페리는 그저 무턱대고 군사적 압력만 가한 게 아니라, 인류로서의 보편타당한 도리를 들어 통호를 ‘권리로서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자 이에 대해 자문을 요청받은 일본 측의 다이묘들 또한 “오랑캐조차 윤리를 바로하고 인류를 걱정하는 도리으로써 요청하는 것이니, 이조차 끊어 버리면 인의의 국풍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페리의 요구를 수락하는 ‘개국’의 제1단계는, 단순히 흑선 같은 위협을 맞닥뜨린지라 굴욕적인 양보를 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일면 국내외에 타당할 법한 도리에 관한 설득을 마주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한 결과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개항 및 개국을 두고 그저 강약의 문제, 득실의 문제로서가 아니

라 “도리에 합당한가의 사상문제”로서 접근하는 움직임이 이미 페리 내항 훨씬 이전부터 일본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도리에 대한 신념은 이후의 교섭과정에서도 나뉠의 맥을 이어간바, 그에 따르면 “적어도 일면에서 도쿠가와 일본은 보편적인 도리를 음미한 결과, 자주적으로 결단하여 ‘근대 서양’에 스스로 열었던 것”이었다고 결론짓는다(본문, p. 374).

천하만국에 공통되는 기준으로서의 인이자 의, 그리고 예라는 보편적인 도리의 관점에 입각해 고립된 “할거견(割據見)”을 극복하고 세계와의 통교를 정당화 해 냈던 요코이 쇼난(横井小楠)과 같은 경우는, 한국의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히 동시기의 조선을 돌아보게끔 이끈다. 비단 서양 오랑캐에 대한 척사(斥邪)적 입장뿐 아니라, 또 다른 편에서는 “태서 공법에 따르면 이미 까닭 없이 남의 나라를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니 … 폐방(즉, 조선)에 무고하게 혹 침략당하는 화가 닥쳐오더라도 또한 여러 나라가 함께 금지할까요? 그러나 석연치 못한 게 있습니다. 일본이 유구국을 폐하고 병탄한 것은 절송(桀宋) 같은 행위일 뿐인데 … 옳고 그름을 일본에 따져 물어 다시 되돌렸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어째서입니까?”처럼, 당시 공법적 신질서의 실상을 날카롭게 가늠해 냈던 경우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혹은 박규수의 “천하 만고에 어찌 나라를 다스리면서 예의가 없는 경우가 있으랴!”처럼, 앞서 도리에 입각한 개국을 연상시키는 발언이 있었음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이런 개개의 지류들이 공히 향하던 바, 즉 조선에게 개국은 ‘사상문제’로서 결국 무엇이었던 것일까? 또한 이는 그간 다섯 세기나 존속해 온 조선이라는 장 내에서의 나뉠의 문젯거리, 나뉠의 모색과는 어떻게 맥이 닿아 있던 것일까? 이처럼 와타나베의 본 저작은 일본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철저한 내재적 접근을 통한,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시각에 입각한 스스로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투고일: 2017년 12월 5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월 30일

참고문헌

-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1998. 『일본정치사상사연구』. 서울: 통나무.
박충석. 2010. 『한국정치사상사(제2판)』. 서울: 삼영사.
신복룡. 2011. 『한국정치사상사(上·下)』. 파주: 지식산업사.
정영훈 외. 2006. 『근현대 한국정치사상사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